

# KMI 동향분석

**VOL.126**  
2019 JULY

발간년월 2019년 7월(통권 제126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최재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 분야 시사점

윤인주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장  
(mouthpiece@kmi.re.kr/051-797-4724)  
최재선 명예연구위원  
(jschoi@kmi.re.kr/051-797-4951)  
진희권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 연구원  
(hkjin@kmi.re.kr/051-797-4766)  
하재영 해양수산남북협력센터 연구원  
(hgy1@kmi.re.kr/051-797-4904)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노동신문의 해양수산 관련 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어로 및 양어·양식 등 수산 관련 기사가 59%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간척(14%), 해양과학(8%), 해운·항만(6%), 해양환경(5%) 해양영토(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 관련 기사에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 보도까지 더하면 전체 기사의 73%를 차지해 북한이 해양수산 분야에서 식량문제 해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공식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수산 부문의 생산 증대를 강조해왔다. 어업 현대화, 대대적인 어로 작업 전개, 양어·양식의 발전이 주된 정책이다. 어업 현대화의 주방향으로 어선, 어구, 어로방식의 현대화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황금해’호, ‘단풍’호 등 표준어선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양어·양식 어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양 부문은 농지 확보를 위한 간척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안북도 대계도와 흥건도 1단계 간척 공사가 완공된 데 이어 최근에는 황해남도 용매도에 212km<sup>2</sup> 규모의 간척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운·항만 부문 기사는 54건(6%)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대표적인 보도내용은 고(故) 김정일 위원장이 “새 세기에 걸맞는 항만” 건설을 주문한 단천항 개발 정도이다. 하지만 2019년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배 수송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고 내각에 선박공업성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해운·항만 분야 정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신문 기사 중 보도 빈도는 낮지만, 관심을 끌만한 내용도 몇 가지 있다. 이를테면, 2020년 4월 15일 완공 예정인 원산 갈마해안관광지 개발이 종종 보도되어 해양관광에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지하초염수(염지하수)로 소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비슷한 공정을 거치는 해양심층수 개발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주요 외교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에 관해서는 한국과 같은 입장에서 단호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북한 노동신문의 해양수산 분야 정책 키워드 분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인도적 협력 사업이 가능하다. 수산 기사 비중에 나타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정책적 관심과 수산물의 단백질 공급 기능을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의 내수면 양식 협력과 치어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해양수산 분야 정책 키워드를 반영한 미래 지향적 협력도 모색해야 한다. 북한 수요를 반영한 어선·어구 현대화, 냉수성 어종의 해면양식, 수산자원 보호·증식 등이다. 지속가능한 연안관리를 위한 연안통합관리체계 구축, 해양심층수와 재생에너지 등 해양자원 공동개발, 동해 표기 등에 관한 남북 공동학술회의, 신한반도구상의 경제협력 사업을 뒷받침할 북한 주요 항만 현대화 사업 등도 있다.

향후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해야 할 사항도 있다.

첫째, 대북제재 여건 하에서도 인도적·환경적 차원에서 협력이 시급한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 해역에서도 희소해진 명태의 치어 방류, 제3국 어선의 남획에 대응하는 오징어 자원 관리, 인도지원 물자 등의 안정적 수송을 위한 해사당국 간 협의기구 구성 등이다.

둘째,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서해평화수역 조성 및 공동어로 시범사업, 동해 해양관광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거점 및 인프라 마련, 각 특구 내 사업의 조정·조율을 지원할 동·서해 ‘(가칭)해양수산협력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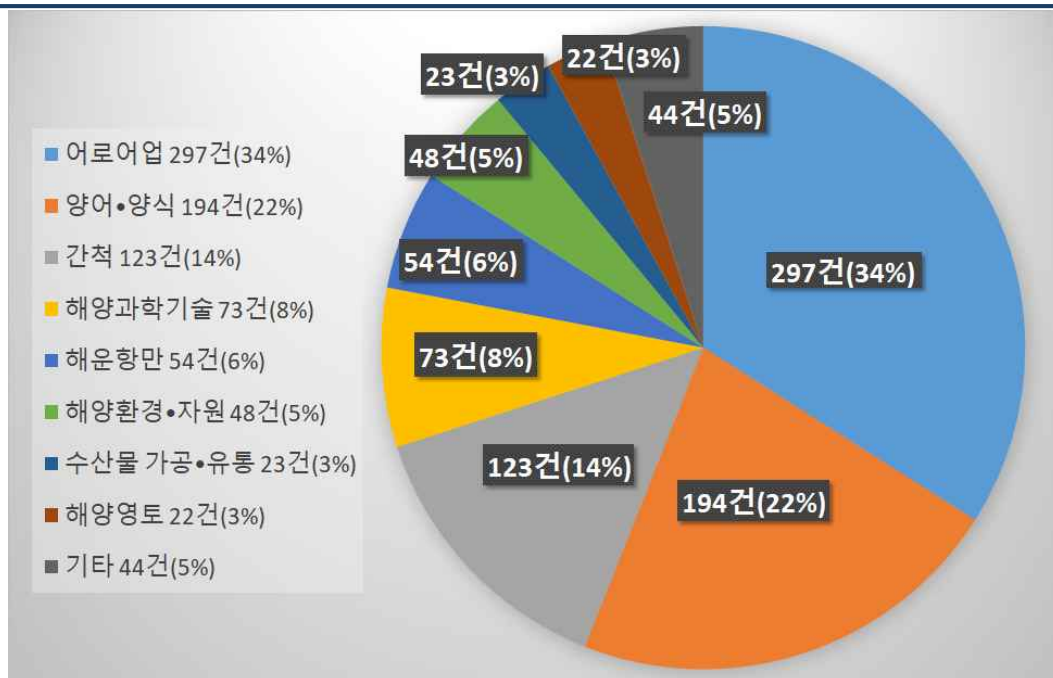
---

## 북한 노동신문 해양수산기사 59%가 수산 이슈

### ■ 북한 노동신문 해양수산 관련 기사 878건 중 514건(59%)이 수산 분야에 집중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 관련 키워드가 제목에 포함된 기사는 878건으로 나타났음
- 이 중 수산 부문 기사가 514건(59%)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어로어업 기사가 297건(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양어/양식 기사는 194건(22%), 수산물 가공유통 기사는 23건(3%)으로 집계됐음
- 간척 관련 123건(14%), 해양과학/기술 73건(8%), 해운·항만 54건(6%), 해양환경/자원 48건(5%)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해 표기 문제 등 해양영토 기사가 22건(3%)으로 조사됨
- 해양과학/기술 기사로는 바닷물 수송관, 담수화, 에너지 등이 보도되었으며, 해양환경/자원 부문에는 소금 생산 등 해양수산자원 활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노동신문 해양수산 관련 키워드 포함 기사의 분포



자료: 노동신문 기사 내용을 KMI가 정리

## 수산 부문은 어로와 양식의 과학화 강조

### ■ 김정은 위원장 공식 집권 후 수산 생산 증대 강조

-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공식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수산 부문의 생산 증대를 강조하면서 신년사에서 자주 언급한 바 있음
- 신년사에서 수산 부문 정책 강조는 매년 문구가 달라지지만 크게 ▲어업 현대화, ▲대대적인 어로 작업, ▲양어·양식<sup>1)</sup> 발전으로 구분됨
- 올해 신년사에는 수산자원의 보호·증식이라는 자원조성 관련 문구가 새롭게 언급된 바 있음

표 1. 북한 신년사의 수산 관련 내용

2014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고기잡이 전투 전개	적극적인 어로 전투	과학적인 어로 전투 전개	수산자원의 보호·증식으로 수산업의 발전 새 길 열자
바닷가 양식 대대적 육성	양어와 양식의 확대	양어와 양식의 활성화	물고기 잡이와 양어·양식의 과학화
현대적인 고기 배 생산			
고기 배와 어구 현대화	동해안에 종합 어구 생산기지 구축	배 제작과 배 수리 능력 제고	수산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수산업의 물질적·기술적 토대 강화			

자료: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내용을 KMI가 정리

### ■ 어업의 핵심은 어선, 어구, 어로방식의 현대화·과학화

- 최근 북한은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어업의 현대화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어선 성능 제고, ▲어구 현대화, ▲어로 방식의 과학화 등 3가지로 분석됨
- 어선 성능 제고의 방향은 기존 목선 대신 속도가 빠르고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다용도 철선 건조임
- 어구 현대화는 트롤어업 어구, 그물인양장치 개발, 각종 어구의 표준을 마련하는 것임
- 어로방식의 과학화는 어군 탐지기 설치, 어장의 해수 온도와 조류 등을 위성 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어장 탐색프로그램 개발, 지휘 선박을 통한 어장 정보 실시간 통보 등의 방법을 도입하는 것임

1) 우리나라는 양식으로 통칭하지만 북한은 물고기에 대해서 양어, 해조류 등에 대해서는 양식으로 표현함

## ■ “황금해”호(號), “단풍”호 등 표준어선 개발·보급

- 북한의 과학적 어로전투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황금해”호(號)라는 표준어선 개발과 보급임
- 2015년 11월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의 홍원조선소에서 처음 건조된 이후, 정주수산사업소에서 같은 계열의 어선 5척을 건조했으며 단천선박공장, 영남배수리공장 등에서도 잇달아 건조되고 있음
  - 이 어선은 신포고기배설계연구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 및 연구진이 북한 어업 환경에 맞게 설계하고, 북한 수산성과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에서 기자재를 공급해서 건조됨
- 황금해호(엔진 출력 320~380hp)는 현대적인 어군 탐지기와 고성능 항해 및 탐색 장비는 물론 고성능의 어구를 갖추고 있음
- 이에 앞서 북한은 2013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단풍”호라는 ‘만능어선’을 건조하여 보급한 바 있음
  - 트롤, 건착망, 저인망 등 기존에 어선 여러 척이 수행하던 기능을 모두 합쳐 놓은 것으로 사시사철 수심과 해류와 상관없이 여러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함
- 한편, 이 같은 어선 건조와는 별도로 2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초고속 쌍동어선을 남포대경수산사업소에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그림 2. 북한의 “단풍”호 계열 어선



자료: 노동신문(2013년 5월 26일)

## ■ 양어·양식업은 식량문제 해결수단의 하나로 적극 추진

- 북한은 양어와 양식을 식량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 왔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자고 강조하고 있음
- 양어 분야 현지도는 김정일 위원장 유훈 사업의 하나인 메기양어장의 비중이 높았음
  - 2015년 삼천메기공장이 연간 3,000t 생산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2017년에는 연간 1,200t 생산 규모의 순천메기공장이 완공되었음
- 바다양식 분야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다 나물”(해조류) 생산에 혁신을 이루자는 것으로 다시마와 미역 양식이 대부분임
- 2015년과 2018년에 동해안 어장에 명태와 연어 치어를 방류했다고 보도됨에 따라 치어 방류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15년 5월에는 새끼 명태 170만 마리, 2017년 5월에는 100만 마리, 2018년 6월 25일에는 수십만 마리를 방류했다는 기사가 보도됨

## 해양은 농업용 간척사업과 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보도

### ■ 식량 증산을 위한 바닷가 간척 사업 대대적으로 진행

- 북한은 1976년 10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1,000만 톤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자연 개조 5대 방침’을 정했는데, 그 중 다섯째 방침이 간척지 개발임
  - 1981년 10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30만 정보(약 3,000km<sup>2</sup>) 간척지 개발계획 결의
-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4월 27일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에서 1981년의 결의 내용을 언급하며 국가적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함
- 간척지 건설과 함께 강하천 정리, 홍수 피해 농토 복구, 빈 땅 활용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능한 많은 곡식을 심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음
- 하지만 간척을 통한 농지 확보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북한 농업의 현대화 정도를 감안할 때 막대한 인력과 장비, 자금이 들어가는 간척지 개발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간척사업을 제한하고, 기존의 간척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표3. 최근 북한의 간척 추진 현황

간척지 명	지 역	면 적	공사 현황	비고
대계도 간척지	평안북도	약 87km <sup>2</sup>	2010년 완공	김정일시대 대자연개조 사업의 모범으로 선전
홍건도 간척지(1단계)	평안북도	약 45km <sup>2</sup>	2016년 완공	2단계 공사 진행 중 (면적: 약 55km <sup>2</sup> )
용매도 간척지	황해남도	약 212km <sup>2</sup>	공사 진행 중 (2010년 착공)	현재 북한이 진행 중인 최대 규모 간척사업

자료: 북한 노동신문 기사 내용을 KMI가 정리

## ■ 정책 우선순위인 원산 갈마해안관광지 개발도 보도

- 노동신문에 보도된 기사 빈도는 낮지만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크게 관심을 받고 있으며 2020년 4월 15일 완공 예정인 원산 갈마해안관광지 개발사업도 주목됨<sup>2)</sup>
- 원산-금강산지구의 전체 면적은 4만 3,600여ha로 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올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 등으로 구분됨
- 원산 갈마해안관광지는 명사십리 해변을 따라 해안 광장구역과 휴양구역 1·2로 나뉘어 건설
  - 휴양구역 1에 호텔, 실내 물놀이장, 야외무대 등이 조성되고 휴양구역 2는 민족문화 체험지구로 고려 의원집, 조선글방, 조선 옷점, 태권도장, 활쏘기 터 등이 건설 예정

## ■ 염지하수를 활용한 소금 생산, 대대적으로 보도

- 소금 생산에 관한 보도도 눈에 띄는데 그 중 “지하초염수”(염지하수)를 활용해서 효과와 경제성이 높은 소금 생산방법을 확립했다는 기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짐
- 염지하수는 바다 깊은 곳(태양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바닷속)의 해양심층수<sup>3)</sup>와 일반적인 지하수가 만나, 지하 암반층에서 섞인 물을 뜻하며,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 같은 고농도 미네랄 성분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염지하수를 활용해 식수, 화장품, 식품 개발 등이 연구되고 있음
- 북한은 염지하수가 일반 해수보다 염도가 높아 소금 생산량이 3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도 하며 소금생산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2) 2013년 3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원산-금강산지구 총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8호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선포, 2015년에 이 지대의 총계획을 발표함

3) 북한은 현재 함경북도 경성만 해양심층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해양심층수의 취수를 비롯해 음용, 화장품 및 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모색 중임. 현재 해수 취수·처리·운반 등 공정에 약 500만 달러(약 57억 원)가 추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음용, 생물학적 성장 촉진제, 화장품 및 의약품 등 분야의 추가적인 R&D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2019년 4월 3일 칭다오에서 조선대외경제법률자문사무소와 중국 덕형로펌(中国德衡律师事务所)이 공동주최한 북한 투자프로젝트 설명회에서 해양심층수 개발 프로젝트 소개. 코트라홈페이지, [http://magic.kmi.re.kr/ekp/mLogin.do?jsessionid=EAO1nfZB5cNlwQArcSZwid2qvE8hwNQMyF16xeF1ozEeC6AYySCvmAH95KYGuJx5.magic\\_servlet\\_engine1](http://magic.kmi.re.kr/ekp/mLogin.do?jsessionid=EAO1nfZB5cNlwQArcSZwid2qvE8hwNQMyF16xeF1ozEeC6AYySCvmAH95KYGuJx5.magic_servlet_engine1) (검색일: 2019년 7월 4일)

## ■ 독도 영유권·동해 표기에 관해서는 일본 비판에 한 목소리

- 한·일 간 현안인 독도 영유권 문제와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견지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거 및 논리와 비슷한 입장을 보임
-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전적인 행위를 규탄하며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에 반대함

표 2. 독도 및 동해 표기 관련 노동신문 기사(2010~2018년)

보도 일자	기사 제목	보도 일자	기사 제목
2011. 2. 14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전적인 행위를 단죄	2015. 2. 21	독도는 영원히 우리의 땅이다
2011. 4. 29	독도 강탈 책동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2017. 2. 25	독도 강탈에 환장한 자들의 추태
2012. 5. 15	동해 표기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2015. 5. 11	독도 강탈의 야망을 버려라
2012. 9. 21	일본의 독도 강탈 책동을 단죄	2018. 2. 15	독도는 신성한 우리의 영토이다
2014. 2. 11	일본은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2018. 2. 21	독도 강탈을 노린 어리석은 광대놀음

주: 보도 일자에서 2월이 자주 나오는 것은 해당 연도 2월 25일이 일본이 주장하는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표기)의 날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자료: 북한 노동신문의 기사 내용을 KMI가 정리

## 해운·항만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증대

### ■ 앞으로 선박 건조 등 해운·항만 정책 수요 증가 예상

- 해양수산 분야 노동신문 기사 중 해운·항만 부문의 기사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북한에는 포구, 어항을 포함해 300여 개의 항이 산재해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무역항은 남포, 송림, 해주, 원산, 홍남, 단천, 청진, 나진, 선봉 등임
-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최고인민회의(4월 11일~12일) 연설에서 “배 수송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한 바 있음
- 이 같은 지시와 함께 내각에 선박공업성을 신설함에 따라 향후 북한의 해운·항만 분야 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광물 수출을 염두에 둔 함경도 단천항 개발 및 준공식

- 선박 건조나 항만 개발 등 물류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2012년에 단천항을 개발했다는 보도가 주목되고 있음

- 단천항 재개발 사업은 2009년 7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작한 지 3년만인 2012년 5월 3일에 준공식을 거행했음
- 함경남도 단천시는 인구 약 35만 명 규모의 연안 도시로, 마그네사이트와 아연, 인회석 등 비철금속이 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채굴된 마그네사이트는 단천 마그네사이트 공장에서 가공되어 수출되는 과정을 거침
-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내각 육해운성에 직접 공사를 맡기고, 3차례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새 세기에 걸 맞는 항만” 건설을 주문한 바 있음
- 북한은 단천항 개발로 검덕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을 수출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고 평가하면서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있음

##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식량 문제 해결을 강조

### ■ 수산 및 간척 관련 보도가 많아 식량 문제 해결이 북한의 최대 관심사

- 북한 노동신문에 보도된 해양수산 기사를 분석한 결과, 수산 및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 관련 보도가 637건(73%)으로 나타나 식량 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재차 확인됨
-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만성적인 식량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의 식량 사정은 최근 10년 사이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 지난해 가뭄과 폭염으로 작곡 생산이 부진했고, 인구 대비 농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식량 증산에 필요한 비료 등이 제때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임
- 농업 전문가들은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을 90~100만 톤(최고 139만 톤)으로 전망함
- 이에 우리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함
- 북한의 정책적 관심과 수산물의 단백질 공급 기능을 고려할 때, 식량 분배 사정이 열악한 내륙 지역의 내수면 양식 협력과 명태 치어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미래 지향적 협력 필요

### ■ 북한의 해양수산 분야 정책 키워드를 반영한 미래 지향적 협력도 모색해야

- (수산) 북한이 희망하는 수산 부문의 물적·기술적 토대 강화를 위한 어선·어구 현대화 사업, 남북한 상호이익을 볼 수 있는 냉수성 어종의 해면양식 협력, 수산자원 보호·증식 사업 등
- (연안) 이미 연안개발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환경파괴와 연안침식을 겪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공유 하면서 재해대응과 지속가능한 연안관리를 도모하는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등
- (자원) 염지하수에 이은 해양심층수 개발, 북한의 에너지 부족 사정을 고려할 때 서해경제공동특구 등의 전력을 지원하는 풍력, 조력 등의 재생에너지 공동개발·공급 등
- (해양)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 문제 등에 관한 남북 공동 학술회의 및 국제적 대응
- (해운·항만) 과거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단천지역 자원개발을 비롯해 새롭게 구상되는 경협 사업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항만 현대화와 해운 수송의 뒷받침이 필수적임

## 과거 남북 합의사항 이행과 동·서해 공동특구 추진과 연계해야

### ■ 해양수산 분야의 남북 간 기존 합의사항 이행 대비 필요

- (수산)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합의서('07)를 통해 수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등의 건설, 북측 동해 수역 입어, 수산물 생산·가공·우량품종 개발, 양식 협력을 합의함
  - 어족자원 고갈에 대응하는 환경적·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북한 해역에서도 희소해진 명태의 치어 방류, 제3국 어선의 남획에 대응하는 오징어 자원 관리는 현재도 추진 가능해 보임
  - 대북제재 완화로 시설 투자와 조업권 거래가 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난 현재의 남북 한 수산업 생산·가공 여건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에서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부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음
- (해운) 남북해운합의서('05)에 따라 남북 간 해상항로 개설(상호 각 7개항, 내부항로[연안수송, cabotage]화)과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해사당국 간 협의기구 구성·운영을 합의
  - 정부가 9월 전에 전달하고자 하는 인도지원용 쌀도 남북 간 해상항로로 운송될 예정인 바, 인도 지원 물자 수송을 계기로 남북 해사당국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운합의서의 취지가 남북 교역물자의 안정적 수송과 남북한 해운항만산업의 공동발전에 있는 만

큼, 향후 남북 교역 재개 시 대규모 물량 수송에 즉각 연계되는 해운 부문에 관해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사전에 논의해야 할 것임

## ■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내 해양수산협력의 거점 및 인프라 마련

- 남북 간 기존 합의사항 이행과 북한의 정책 키워드를 반영한 협력 사업은 9·19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
  -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및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 설정도 포함되어 있음
- 기존 합의 이행의 틀 안에서 북한의 관심 사항을 반영할 경우 수산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 사업을 다각도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임
- 동서해 특구의 틀 내에서 수산 협력의 거점을 마련하고 수산업과 연계 가능한 항만 등의 인프라 조성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최근 북한은 수산물 가공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수산가공유통단지 조성 및 함께 이를 지원하는 거점 항만 개발을 제안해볼 수 있음
- 이는 수산물 생산을 위한 (공동)조업, 치어 방류·종자 지원 등 수산자원 조성에도 연계되므로 이러한 일련의 가치사슬을 따라 설계·진행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
- 서해는 평화수역 조성 및 연계한 공동어로 구역을 중심으로, 동해는 금강산·원산 등 관광지의 수산물 공급을 중심으로 거점과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북한은 동해안 냉수대를 이용한 스마트 연어 양식장 건설 및 운영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문에 대한 협력도 가능함
  - 경기도는 북한의 연백제염소 소금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북한의 지하초염수에서 생산된 소금을 이용한 남북 공동브랜드 개발도 가능함
  - 민물 양식을 위한 이동식 가두리 양식장을 270곳 이상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담수어 생산에 대한 협력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됨
-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특구 내 해양수산협력의 구심점이 필요하므로 전문성을 갖추고 관련 사업의 조정·조율을 지원할 ‘(가칭)남북해양수산협력센터’ 설립이 필요함
- 동·서해 해양수산협력센터 설립이 되기 전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해양수산 분야 창구를 마련하여 남북협력사업 지원에 필요한 의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질,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हित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 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엔 기여' -KMI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벙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마·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서핑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파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URL: <https://www.kmi.re.kr/>